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순 서

I.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	171
II. 국가채무 현황	174
III. 국가채무 전망 및 관리방안	183
〈부록〉 지방정부 채무	190

I.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

1. 수립목적 및 근거

□ 중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및 상환계획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

□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 제91조 등에 따라 국회 제출

2. 작성주체

□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채무를 총괄·관리하며, 매년 각 부처 협조를 얻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 국고채권(이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등 세부사항은 소관 부처가 관리

3. 작성범위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¹⁾이 발행한 채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회계 또는 기금 간 내부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차입금은 제외

① 국채

- 국고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등*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 그 외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하기 위한 '출자 재정증권'이 있으나, '86년 이후 발행실적이 없고 잔액 규모가 작음(94억원)

1)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의미

< 국채 종류별 발행조건 및 발행 방법 >

종류	발행조건		발행방법	발행목적	소관 기금	근거법령
	금리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	2~50년	경쟁입찰	재정자금 조달	공공자금 관리기금 (재정경제부)	국채법,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제1종 ²⁾) 국민주택채	연1.3%	5년	첨가소화	주택건설 촉진 재원조달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외평채	낙찰금리	발행시 결정	경쟁입찰	외환시장 안정 등	외국환 평형기금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법

② 차입금

-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로 부터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
 - 차입대상에 따라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³⁾으로 구분
- * 해외차입금은 '16년까지 전액 상환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없음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이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
 - 국회의 사전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다음 연도 등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상환하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함

2) 제2종 국민주택채는 '13년 5월 발행중단

3) 해외차입금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중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재정차관을 의미(공공차관 중 보증차관은 보증채무로 분류)

〈 참고 〉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 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Ⅱ. 국가채무⁴⁾ 현황

1.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 실적

- '25년 국가채무는 1,305.2조원(GDP대비 48.8%)으로,
'24년(1,175.0조원, GDP대비 45.8%) 대비 130.2조원 증가(+3.0%p)
- 중앙정부 채무는 1,268.1조원으로 261.7조원을 차입하고 134.8조원을 상환하여 전년 대비 127.0조원 증가
 - 지방정부 순채무는 37.1조원으로 전년 대비 3.2조원 증가

<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실적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잔액	'24년			'25년		
		차입	상환 ¹⁾	잔액	차입	상환 ¹⁾	잔액
□ 국가채무	1,126.8	-	-	1,175.0	-	-	1,305.2
(GDP 대비, %)	(46.8)	-	-	(45.8)	-	-	(48.8)
○ 중앙정부 채무	1,092.5	175.2	126.6	1,141.2	261.7	134.8	1,268.1
■ 국채	1,091.1	174.4	125.7	1,139.8	261.0	134.3	1,266.5
- 국고채	998.0	158.4	108.5	1,047.9	227.4	114.0	1,161.3
- 국민주택채	81.6	14.1	16.7	79.1	15.2	18.7	75.6
- 외평채	11.5	1.8	0.5	12.8	18.4	1.7	29.5
- 출자재정증권	0.0	-	-	0.0	-	-	0.0
■ 차입금	1.2	0.8	0.8	1.2	0.7	0.4	1.5
- 국내차입금	1.2	0.8	0.8	1.2	0.7	0.4	1.5
- 해외차입금	-	-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	0.0	0.2	-	0.0	0.1
- 일반회계	0.1	-	0.0	0.1	-	0.0	0.1
- 특별회계	0.1	-	-	0.1	-	-	0.1
○ 지방정부 ²⁾ 순채무	34.3	-	-	33.9	-	-	37.1

¹⁾ 외화표시 채무(외평채 등)의 환율 변동분 포함

²⁾ 지방정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4)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나, 정부 전체의 채무 규모 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순채무도 포함하여 분석

2. 국가채무 증감 추이

① 국가채무 증감 추이

- '25년 국가채무*는 1,305.2조원으로 전년 대비 130.2조원 증가, 국가채무 증가율**은 11.1%로 전년(4.3%)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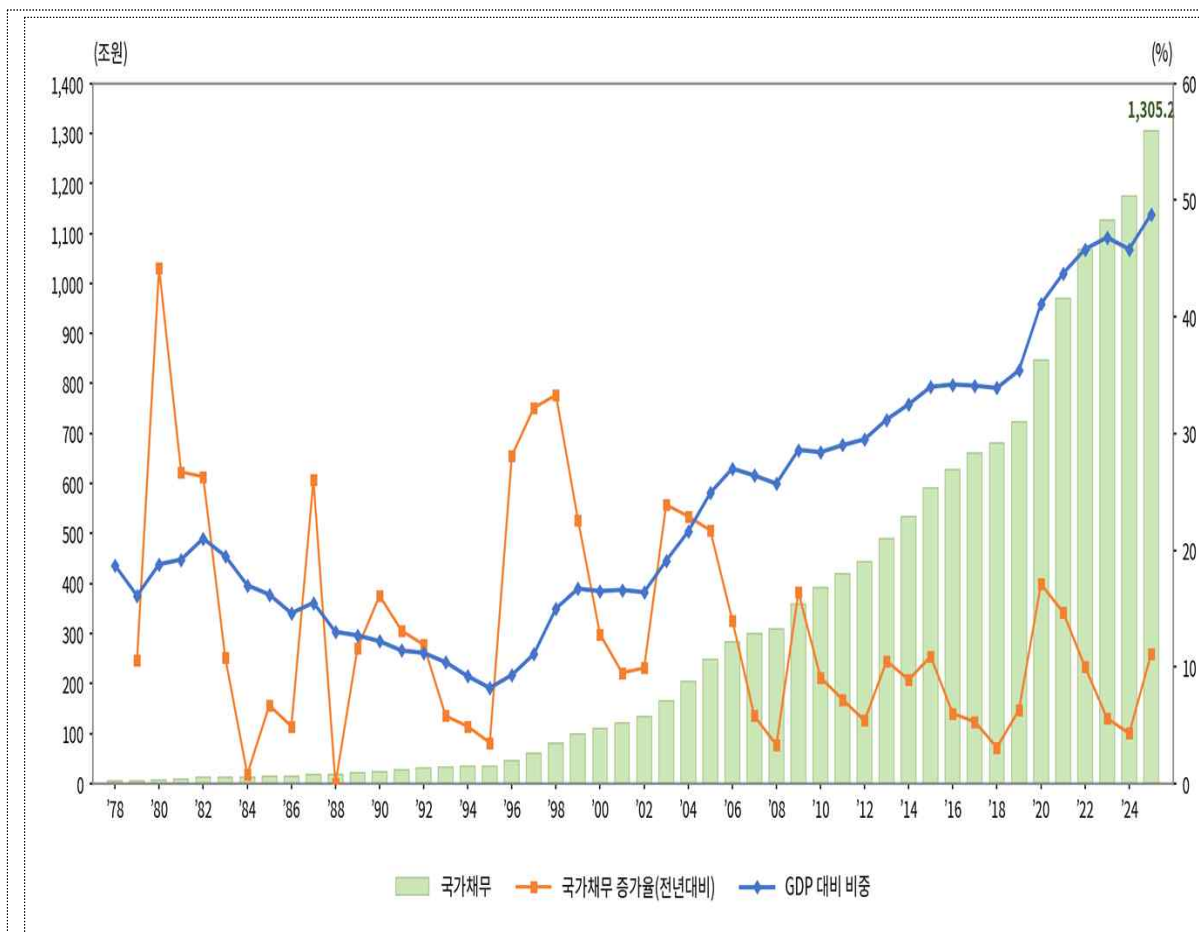
* 국가채무(조원) : ('21) 970.7 → ('22) 1,067.4 → ('23) 1,126.8 → ('24) 1,175.0 → ('25) 1,305.2

** 국가채무 증가율(전년대비, %) : ('20) 17.1 → ('21) 14.7 → ('22) 10.0 → ('23) 5.6 → ('24) 4.3 → ('25) 11.1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8%로 전년(45.8%) 대비 3.0%p 증가

* GDP 대비 비중(%) : ('21) 43.7 → ('22) 45.8 → ('23) 46.8 → ('24) 45.8 → ('25) 48.8

< 국가채무 추이 >



<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 >

(단위: 조원, %)

연도	국가 채무 (A)	국내 총생산 (GDP) (B)	국가 채무 비율 (A/B, %)	연도	국가 채무 (A)	국내 총생산 (GDP) (B)	국가 채무 비율 (A/B, %)
'78년	4.7	25.2	18.7	'02년	133.8	813.2	16.4
'79년	5.2	32.4	16.1	'03년	165.8	868.1	19.1
'80년	7.5	39.7	18.8	'04년	203.7	942.9	21.6
'81년	9.5	49.7	19.2	'05년	247.9	995.2	24.9
'82년	12.0	57.3	21.0	'06년	282.7	1,045.7	27.0
'83년	13.3	68.1	19.5	'07년	299.2	1,134.5	26.4
'84년	13.4	78.6	17.0	'08년	309.0	1,203.0	25.7
'85년	14.3	88.1	16.2	'09년	359.6	1,255.3	28.6
'86년	15.0	103.0	14.6	'10년	392.2	1,379.5	28.4
'87년	18.9	121.7	15.5	'11년	420.5	1,450.6	29.0
'88년	18.9	146.0	13.0	'12년	443.1	1,504.7	29.5
'89년	21.1	165.8	12.7	'13년	489.8	1,570.9	31.2
'90년	24.5	200.6	12.2	'14년	533.2	1,638.5	32.5
'91년	27.7	242.5	11.4	'15년	591.5	1,740.8	34.0
'92년	31.0	277.5	11.2	'16년	626.9	1,833.0	34.2
'93년	32.8	315.2	10.4	'17년	660.2	1,934.2	34.1
'94년	34.4	372.5	9.2	'18년	680.5	2,007.0	33.9
'95년	35.6	437.0	8.2	'19년	723.2	2,040.6	35.4
'96년	45.6	490.9	9.3	'20년	846.6	2,058.5	41.1
'97년	60.3	542.0	11.1	'21년	970.7	2,223.7	43.7
'98년	80.4	537.2	15.0	'22년	1,067.4	2,328.2	45.8
'99년	98.6	591.5	16.7	'23년	1,126.8	2,407.6	46.8
'00년	111.2	675.7	16.5	'24년	1,175.0	2,564.2	45.8
'01년	121.8	723.7	16.6	'25년	1,305.2	2,676.7	48.8

¹⁾ 경상가격 기준

²⁾ '96년부터 지방정부 순채무 포함

2 국제비교

-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한 '24년 결산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1,270.8조, D2)는 GDP 대비 49.7%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IMF 선진국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GDP%, IMF FM '26.4월호) >

IMF 선진국	'21	'22	'23	'24	'25	'26
단순평균	76.0	72.0	70.6	70.8	70.7	71.0
한국	48.0	49.8	50.5	49.7	52.3	54.4
일본	222.7	227.8	220.3	214.5	206.5	204.4
싱가포르	139.9	153.3	170.4	166	171.3	171.9
이탈리아	145.8	138.4	133.9	134.7	137.1	138.4
그리스	197.8	179.2	165.5	155.4	145.7	136.9
미국	125	119.1	120	122.3	123.9	125.8
프랑스	112.8	111.4	109.6	113.1	116.2	118.8
캐나다	112.6	103.5	105.1	110	113.5	110.7
벨기에	108.5	103.1	102.2	103.9	106.3	109.2
영국	103.4	97.5	98.9	99.9	102.3	103.6
스페인	115.6	109.2	105.1	101.6	100.4	98.2
핀란드	73.1	74.0	77.0	82.4	89.3	93.1
포르투갈	123.9	111.2	96.9	93.5	89.9	85.6
오스트리아	82.4	78.1	77.8	79.2	80.5	82.1
이스라엘	67.7	60.3	61.3	67.6	69.2	70.4
슬로베니아	74.8	72.8	68.3	66.6	65.9	65.2
독일	67.9	64.4	62.3	62.2	62.9	64.6
슬로바키아	60.2	57.8	55.8	59.7	61.6	63
뉴질랜드	47.5	46.9	47.3	51.4	54.7	56.7
크로아티아	78.2	68.5	60.9	57.4	55.9	56.5
아이슬란드	73.6	66.4	61.5	60.4	56.1	53.6
키프로스	96.5	80.3	71.1	62.8	55.3	50.9
호주	55.4	50	49.4	50.6	51	50.6
라트비아	45.9	44.4	44.4	46.2	46.9	47.4
몰타	49.6	50.1	46.8	46.0	46.8	47.3
체코	40.7	42.5	42.2	43.3	44.6	46.4
리투아니아	43.3	38.3	37.1	38	39.8	45.1
네덜란드	50.5	48.4	45.8	43.7	43.3	44.1
노르웨이	40.1	34.8	42.4	52.8	45	42.9
스위스	39.7	35.9	37.3	40.5	39.4	38.5
스웨덴	37.3	34.2	32.1	33.9	34.9	36.7
아일랜드	52.4	42	41.8	38.3	32.0	32.4
안도라	48.6	38.9	35.4	32.9	30.7	28.4
불가리아	23.9	22.5	22.9	23.8	27.1	28.2
룩셈부르크	24.2	24.9	24.7	26.3	27	28
에스토니아	18.4	19.2	20.2	23.5	24.2	27.8
덴마크	39.6	33.3	33	30.5	27.5	27.4
홍콩	1.9	4.3	6.3	9.2	11.9	14.1

3.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포트폴리오 분석

①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구성 현황

- '25년 중앙정부채무(1,268.1조원)는 국채 1,266.5조원(99.9%), 차입금 1.5조원(0.1%),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0.01%)으로 구성
 - 국채 중 국고채는 1,161.3조원(중앙정부 채무 중 91.6%), 국민주택채는 75.6조원(6.0%), 외평채는 29.5조원(2.3%)
- 외평채 29.5조원은 외화표시 외평채 15.8조원(53.6%)과 원화표시 외평채 13.7조원(46.4%)으로 구성
 - 외화표시 외평채는 달러화 71.25억 달러(64.5%), 유로화 18억 유로(22.3%), 엔화 1,800억 엔(10.4%), 호주달러화 4.5억 호주달러(2.7%)

< 연도별 중앙정부채무 구성 현황 >

(단위: 조원,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 중앙정부채무	939.1 (100.0)	1,033.4 (100.0)	1,092.5 (100.0)	1,141.2 (100.0)	1,268.1 (100.0)
○ 국채	937.0 (99.8)	1,031.5 (99.8)	1,091.1 (99.9)	1,139.8 (99.9)	1,266.5 (99.9)
- 국고채	843.7 (89.8)	937.5 (90.7)	998.0 (91.3)	1,047.9 (91.8)	1,161.3 (91.6)
- 국민주택채	82.2 (8.7)	82.2 (7.9)	81.6 (7.5)	79.1 (6.9)	75.6 (6.0)
- 외평채	11.2 (1.2)	11.8 (1.1)	11.5 (1.1)	12.8 (1.1)	29.5 (2.3)
○ 차입금	2.0 (0.2)	1.9 (0.2)	1.2 (0.1)	1.2 (0.1)	1.5 (0.1)
- 국내차입금	2.0 (0.2)	1.9 (0.2)	1.2 (0.1)	1.2 (0.1)	1.5 (0.1)
○ 국고채무부담행위	0.06 (0.01)	0.05 (0.01)	0.20 (0.02)	0.16 (0.01)	0.13 (0.01)
- 일반회계	0.01 (0.00)	- -	0.14 (0.01)	0.11 (0.01)	0.07 (0.01)
- 특별회계	0.05 (0.01)	0.05 (0.01)	0.05 (0.00)	0.05 (0.00)	0.05 (0.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② 국가채무 만기 및 만기도래 현황 ('25년 말 기준)

- 잔존만기별 국가채무 비중은 1년 미만 8.4%, 1~3년 18.4%, 3~5년 14.7%, 5~10년 15.8%, 10년 이상은 42.7%로 구성

< '25년 국가채무 만기도래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 국가채무	106.7 (8.4)	233.3 (18.4)	186.3 (14.7)	199.8 (15.8)	542.0 (42.7)	1,268.1 (100.0)
○ 국채	105.6 (8.3)	233.2 (18.4)	185.9 (14.7)	199.8 (15.8)	542.0 (42.8)	1,266.5 (100.0)
○ 차입금	0.9 (61.0)	0.1 (9.1)	0.5 (29.9)	- -	- -	1.5 (100.0)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100.0)	- -	- -	- -	- -	0.1 (10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잔존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물 비중 지속 상승

< 국가채무 만기도래 연도별 비중 비교 >

(단위 : %, %p)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21년	6.1	21.4	16.2	24.0	32.4	100.0
'22년	8.6	19.7	16.5	19.9	35.3	100.0
'23년	9.0	19.1	13.7	20.7	37.5	100.0
'24년(A)	8.4	19.7	12.0	18.8	41.0	100.0
'25년(B)	8.4	18.4	14.7	15.8	42.7	100.0
차 이(B-A)	0.0	△1.3	2.7	△3.0	1.7	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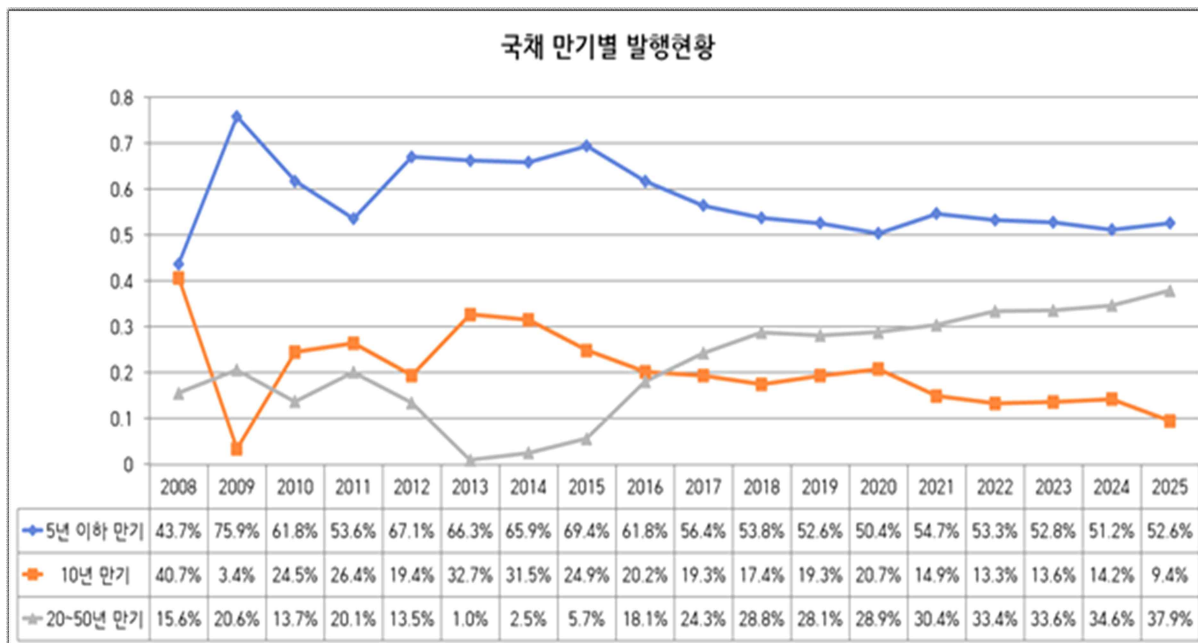
○ '25년 국가채무 평균만기는 12.8년으로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말 대비 0.4년 증가

- 국가채무 듀레이션⁵⁾은 '25년 9.1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감소

< 연도별 국가채무 평균만기 및 듀레이션 >

(단위 : 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평균만기	7.2	7.7	8.4	9.2	9.7	10.4	10.8	11.2	11.8	12.4	12.8
듀레이션	6.2	6.5	6.9	7.7	8.3	8.7	8.6	7.8	8.6	9.2	9.1



③ 국가채무 이자 현황

○ '25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1.7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증가

* 국고채 이자비용이 30.3조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약 95.6% 차지

- 국가채무 규모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 확대

* 국가채무(조원) : ('21) 970.7 → ('22) 1,067.4 → ('23) 1,126.8 → ('24) 1,175.0 → ('25) 1,305.2

5) 듀레이션(duration) :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평균만기 개념으로 채권투자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평균기간을 의미함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채권의 액면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낮을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짐)

<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

(단위: 조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 국가채무 이자 ¹⁾	19.2	21.1	24.7	28.3	31.7
○ 국채 이자 (국채 잔액 대비, %)	19.2 (2.0)	21.0 (2.0)	24.6 (2.3)	28.2 (2.5)	31.7 (2.5)
■ 국고채	17.7	19.4	23.1	26.8	30.3
■ 국민주택채	1.2	1.3	1.3	1.2	1.0
■ 외평채 ²⁾	0.3	0.3	0.3	0.3	0.5
○ 차입금 이자 (차입금 잔액 대비, %)	0.04 (1.7)	0.03 (1.5)	0.04 (3.0)	0.04 (3.3)	0.04 (2.7)
■ 국내차입금	0.04	0.03	0.04	0.04	0.04

¹⁾ 국가채무 이자 :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 이자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²⁾ 외평채 : '25년부터 원화 외평채 포함

○ '26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5조원*으로 전년 대비 4.8조원 증가

* 국고채 이자비용이 34.4조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약 94.2% 차지

- '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

*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GDP%, OECD):

[한국] ('25) 1.3 ('26) 1.3 ('27) 1.5 [OECD평균] ('25) 1.9 ('26) 2.0 ('27) 2.1

※ OECD 평균은 회원국 38개국 중 통계가 부재한 칠레 등 6개국 제외한 32개국 평균

<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전망 >

(단위: 조원, %)

구 분	'25년(결산)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 국가채무 이자 (GDP 대비, %)	31.7 (1.2)	36.5 (1.3)	42.8 (1.4)	45.4 (1.4)	48.9 (1.4)	53.3 (1.5)
○ 국채 이자 (GDP 대비, %)	31.7 (1.2)	36.5 (1.3)	42.7 (1.4)	45.3 (1.4)	48.9 (1.4)	53.2 (1.5)
■ 국고채	30.3	34.4	40.4	43.2	46.6	51.1
■ 국민주택채	1.0	1.0	0.8	0.9	1.0	0.8
■ 외평채	0.5	1.1	1.5	1.2	1.3	1.3
○ 차입금 이자 (차입금 잔액 대비, %)	0.0 (2.7)	0.0 (3.5)	0.0 (3.8)	0.1 (4.2)	0.1 (4.3)	0.1 (5.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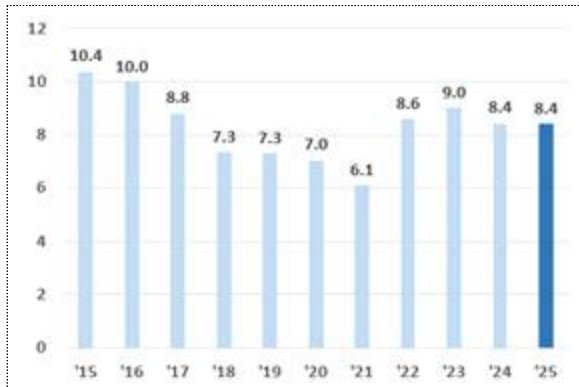
4 국제비교

-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채무 비중은 8.4%로, 주요 선진국 평균(26.5%)보다 낮은 수준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단기채* 비중 증가하였으나, 장기물 발행 확대로 다시 감소 전환

* 추경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시 단기채(3년·5년물) 집중 발행

< 단기채무 비중 추이(%) >



< 주요국 단기채무 비중(%) >



- 외국인 보유한 국가채무 비중은 24.7%로 주요 선진국 평균 (24.5%)과 유사한 수준이며, '1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 외국인 보유 비중 증가는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반면,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외국인 보유 비중 추이(%) >



< 주요국 외국인 보유 비중(%) >



Ⅲ. 국가채무 전망 및 관리방안

1. 2026년 국가채무 전망

□ '26년말 국가채무는 1,413.7조원(GDP 대비 50.6%)으로,
'25년 결산(1,305.2조원) 대비 108.5조원 증가할 전망

-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한 국고채 잔액 증가(108.4조원) 등에 기인
- 지방정부 순채무는 전년대비 0.4조원 감소한 36.7조원

< '26년 차입 및 상환 추정액 >

(단위: 조원)

구 분	'25년 결산(A)	'26년 추경(B)	'26년말 전망			전년 대비 (C-A)	추경 대비 (C-B)
			차입	상환 ¹⁾	잔액(C)		
□ 국가채무	1,305.2	1,412.8	-	-	1,413.7	108.5	0.9
(GDP 대비, %)	(48.8)	(50.6)	-	-	(50.6)	(1.8)	(0.0)
○ 중앙정부채무	1,268.1	1,376.1	261.0	152.1	1,377.0	108.9	0.9
■ 국채	1,266.5	1,374.7	260.3	151.2	1,375.6	109.2	0.9
- 국고채	1,161.3	1,269.6	225.7	117.2	1,269.8	108.4	0.1
- 국민주택채	75.6	69.8	14.1	18.8	70.9	△4.7	1.1
- 외평채	29.5	35.3	20.6	15.1	35.0	5.5	△0.3
■ 차입금	1.5	1.3	0.7	1.0	1.3	△0.2	△0.0
- 국내차입금	1.5	1.3	0.7	1.0	1.3	△0.2	△0.0
- 해외차입금	-	-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	0.0	0.1	△0.0	0.0
- 일반회계	0.1	0.0	-	0.0	0.0	△0.0	0.0
- 특별회계	0.1	0.1	-	-	0.1	-	-
○ 지방정부 순채무	37.1	36.7	-	-	36.7	△0.4	-

¹⁾ 외화표시 채무(외평채, 해외차입금 등)의 환율 변동분 포함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2026~2030년 국가채무 전망

□ '30년 국가채무는 1,734.1조원(GDP 대비 49.0%) 수준으로 전망

○ 중앙정부 채무는 1,696.4조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37.7조원 수준

* 국가채무(조원) : ('27) 1,519.8 → ('28) 1,600.3 → ('29) 1,659.1 → ('30) 1,734.1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 ('27) 48.3 → ('28) 48.9 → ('29) 48.8 → ('30) 49.0

< '27~'30년 국가채무 증감 전망액 >

(단위: 조원)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차입	상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 국가채무	-	-	1,519.8	-	-	1,600.3	-	-	1,659.1	-	-	1,734.1
(GDP 대비, %)	-	-	(48.3)	-	-	(48.9)	-	-	(48.8)	-	-	(49.0)
○ 중앙정부 채무	264.7	159.0	1,482.7	258.7	178.4	1,563.0	209.7	151.2	1,621.5	260.0	185.1	1,696.4
■ 국채	263.8	158.3	1,481.1	258.0	177.7	1,561.4	209.1	150.5	1,620.0	259.4	184.4	1,694.9
- 국고채	222.8	126.6	1,366.0	226.2	144.1	1,448.1	174.5	116.3	1,506.3	225.5	154.4	1,577.4
- 국민주택채	15.3	16.5	69.8	15.6	13.5	71.9	15.8	14.2	73.5	17.8	13.9	77.4
- 외평채	25.6	15.3	45.3	16.2	20.1	41.4	18.8	20.0	40.2	16.1	16.1	40.2
■ 차입금	0.7	0.7	1.3	0.7	0.7	1.3	0.7	0.6	1.4	0.6	0.7	1.4
- 국내차입금	0.7	0.7	1.3	0.7	0.7	1.3	0.7	0.6	1.4	0.6	0.7	1.4
- 해외차입금	-	-	-	-	-	-	-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0	0.3	-	0.1	0.2	-	0.1	0.2	-	0.1	0.1
○ 지방정부 순채무	-	-	37.1	-	-	37.4	-	-	37.6	-	-	37.7

* 지방정부 순채무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전망자료 활용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국가채무 내역별 전망 및 관리방안

(1) 내역별 전망 및 관리방안

① 일반회계 적자보전

-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재원을 집중해 '재정-경제 선순환*' 구현을 위한 확장 재정 추진

* 적극재정 → 성과제고 → 경제성장 → 세입확충 → 지속가능 재정

- 이와 동시에 성과중심 재정운용,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혁신을 병행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일반회계 적자보전 잔액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발 행	105.6	100.1	75.1	53.3	66.5
상 환	-	-	-	-	-
잔 액	976.0	1,076.0	1,151.1	1,204.4	1,271.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② 공적자금 국채전환

- '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27년까지 전액 상환 전망

< 공적자금 국채전환 잔액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발 행	-	-	-	-	-
상 환	7.1	7.9	-	-	-
잔 액	7.9	-	-	-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외환시장 안정, 외환보유액 안정적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30년 242.7조원 수준으로 전망

* 전년대비 국채 잔액 증가액(조원): ('26)5.7 → ('27)10.3 → ('28)△3.9 → ('29)△1.2 → ('30)0

-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응자산⁶⁾ 관리를 강화하여 이자 등 발행비용 자체상환이 가능하도록 노력
 - 짧은 만기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여 이자비용을 감축하고,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채권 차환에 대비
 - 외화자산은 안전성·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 예치, 한국투자공사 위탁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 계		237.4	247.8	243.9	242.7	242.7
외평채	발행	20.6	25.6	16.2	18.8	16.1
	상환	15.1	15.3	20.1	20.0	16.1
	잔액	35.0	45.3	41.4	40.2	40.2
국고채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발행	34.1	10.0	12.0	20.6	51.5
	상환	33.8	10.0	12.0	20.6	51.5
	잔액	202.5	202.5	202.5	202.5	202.5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6) 한국은행 예치금, 한국투자공사(KIC) 위탁자산 등의 형태로 외화 대응자산 보유

④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 부동산 시장, 경제상황 등에 따른 거래량 변화로 실 발행 규모는 가변적이나, 향후 상환규모 증감에 따라 '30년에 77.4조원 수준으로 전망
- 한편, 과거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집중 발행되었던 국민주택채권 상황이 '26년까지 일시적으로 집중될 전망
- 이에, 기금 융자금 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체계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주택채권 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예정

<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잔액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발 행	14.1	15.3	15.6	15.8	17.8
상 환	18.8	16.5	13.5	14.2	13.9
잔 액	70.9	69.8	71.9	73.5	77.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국고채 관리방안

□ 안정적 국고채 발행을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 뒷받침

-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미래세대 지원 등을 위한 재정소요 및 국채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채 발행량 결정

* 연간 국고채 발행량(조원) : ('23) 165.7 → ('24) 158.4 → ('25) 227.4 → ('26e) 225.7

- 재정상황 및 대내외 경제여건, 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 발행물량을 시기별·연물별로 탄력적 조정

□ 견조한 국고채 수요기반 확충 및 투자 환경개선

- 외국인 투자자 IR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신규 외국인 투자수요 적극 유인

* 외국인 국고채 보유량(조원 기말) : ('23) 219.5 → ('24) 238.7 → ('25) 297.4 → ('26e) 327.1

-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를 허용하는 등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노력 지속

* 연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량(조원) : ('24)0.7 → ('25)1.2 → ('26e)2.0

□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 등 안정적 시장 관리

- 적정 수준의 조기상환을 통해 국고채 만기구조를 분산하여 향후 만기가 일시에 집중되는 리스크 축소
-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실시

〈 부 록 〉 지방정부 채무⁷⁾

1. 작성 배경

- 국가재정법(제91조)상 국가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는 포함되지 않아 국가채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 지방정부 채무도 포함되지 않으나,
 - 국가채무의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성 및 국제비교 등을 위해 '05년부터('96년도까지 소급)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
- '08회계연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포함한 국가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작성

*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방정부 채무현황, 향후 전망과 함께 주무부처 관리방안을 수록

2. 지방자치단체 채무 개요 및 제도

- (종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 보증채무부담행위 확정액으로 구분
 -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제44조(채무부담행위) 등
 - (지방채) 대규모 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외부로부터 증권, 차입금 형식으로 차입하는 금액
 - (채무부담행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보증채무부담 확정채무) 보증채무 부담행위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액

7)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가 있으며, 전자는 행정안전부, 후자는 교육부에서 관리

□ (발행)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결로, 한도액 초과시에는 행안부 협의 또는 승인 후 지방의회의결로 발행

- 한도액은 자치단체별 채무액, 경상일반재원 등을 기초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대도시의 경우 11%)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

< 한도액 산정 기준 >

구 분		시·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구
총 한 도 액 (A + B)	기본 한도액(A)	【경상일반재원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 우발채무 50%)】× 10%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25년 차환채 발행액 +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채무관리) 지방채 잔액 및 향후 5년간 지방채 발행·상환계획 등을 매년 수립,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관리채무부담도가 35% 이상인 자치단체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 및 행안부 제출
- 관리채무부담도 60% 이상인 자치단체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에 사용하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기금 또는 별도 회계 등에 적립

$$* \text{관리채무부담도} = \frac{\text{관리채무(일반채무+BTL임대료)}}{\text{경상일반재원(결산)}} \times 100$$

3.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및 관리방안

[1] 현황

□ '25년 지방자치단체 총채무⁸⁾는 45.0조원으로 전년대비 4.3조원 증가

○ 이 중 對중앙정부 채무는 7.9조원으로 전년대비 1.1조원 증가

□ '25년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37.1조원으로 전년대비 3.2조원 증가

*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지방자치단체 총채무(45.0조원)에서 중앙정부가 차입한 채무(對중앙정부채무 7.9조원)를 차감하여 산출

< 지방자치단체 순채무 현황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지방자치단체 총채무(A)	38.6	40.7	45.0
對중앙정부 채무(B)	4.3	6.8	7.9
지방자치단체 순채무(A-B)	34.3	33.9	37.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전망

□ 세입여건 악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25년 까지 총채무가 증가 후, '3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순채무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지방자치단체 총채무(A)	44.8	44.8	44.8	44.7	44.2
對중앙정부 채무(B)	8.1	7.7	7.4	7.1	6.5
지방자치단체 순채무(A-B)	36.7	37.1	37.4	37.6	37.7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8) 증서차입(16.5조원), 증권발행(28.3조원), 보증채무이행책임액(0.1조원)으로 구성

- 증서차입 : 중앙정부(7.8조원), 지방재정공제회 자금(0.7조원), 지역상생발전기금(2.5조원), 지역개발기금(1.5조원), 민간금융기관(4.0조원)
- 증권발행 : 도시철도채권(5.7조원), 지역개발채권(13.1조원), 모집공채(9.5조원)

[3] 관리방안

- ☐ 불필요한 재정지출 감소 및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 자치단체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부담 최소화
 - 우발채무 관련 사업에 대한 분기별 집중 모니터링
 - 우발채무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의무화, 우발채무 관련 협약체결(전) 컨설팅 지원, HELP DESK 운영 등
- ☐ 관리채무부담도,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 관리를 통해 채무 과다 자치단체에 지속 관리, 지방재정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4.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 현황 및 관리방안

[1] 현황

- ☐ '25년 지방교육자치단체 총채무는 對중앙정부 채무를 포함하여 전액 상환되어 잔액이 없는 상황

<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 현황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A)	-	-	-
對중앙정부 채무(B)	-	-	-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A-B)	-	-	-

[2] 전망

□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제출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향후 5년('26~'30) 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 세수 결손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상황 악화가 3년간 이어지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보유한 기금적립금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향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정화기금 보유액) '23년 9.6조원→'24년 6.2조원→'25년 3.7조원→'26년(본예산) 1.8조원

<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A)	-	-	-	-	-
對중앙정부 채무(B)	-	-	-	-	-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A-B)	-	-	-	-	-

[3] 관리방안

□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보유한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금 소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의 지방채 발행·운용

- 지방교육자치단체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여 운용하되,
- 재정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의 우선 활용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하여 지방채 발행 최소화